

정보경제와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론*

The Information Economy and Information Sharing for an Activation of Information Flow

이 순 재(Soon-Jae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연속론적 관점과 정보공유론 |
| II. 정보사회와 정보경제 | IV.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론 |
| 1. 정보사회의 개념 | 1. 정보정책 |
| 2. 정보경제론 | 2. 정보 본연의 가치회복 |
| 3. 정보의 경제성과 상업화 | 3. 정보격차의 해소 |
| III. 정보사회 이론과 정보경제론 | 4. 정보공유를 위한 사회운동 |
| 1. 단절론적 관점과 정보주의 | V. 결론 |

초 록

지식과 정보는 오늘날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사회의 다양한 개념과 정보의 경제적 관점을 고찰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의 정보 관점을 살펴본다.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정보정책과 정보본연의 가치회복,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공유를 위한 사회운동 등의 대안이 제시된다.

주제어 : 정보경제, 정보경제론, 정보유통, 정보공유

Abstract

Recently,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recognized as resources which contain important economic, social and individual values. This study investigates a concept of information society, an economic viewpoint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alism, sharing of information. As a result, various plans are suggested such as information policy, recovery of inherent value of information, dissolution of information gap and social movement for information sharing.

Key Words : information economy, economics of information, information flow, information sharing

* 본 논문은 200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재 정리한 것이다.

** 동부산대학 문헌정보과교수(sjlee@sb.dpc.ac.kr)

· 접수일 : 2001. 5. 13

I. 서론

지식과 정보는 오늘날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식과 정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그리고 올바른 민주사회의 기능수행에 중추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지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기업 그리고 국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간에 지식과 정보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들을 통해 가히 새로운 사회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현상들에 내재하는 핵심적 요인에는 항상 지식과 정보가 개입되어 있고 바로 그것들이 유발시키는 문제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정보화를 주요 동인으로 하는 정보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이영환, pp.43-50] 그것들은 정보이용의 효율성의 문제, 거래비용, 비대칭정보의 문제, 정보분배의 문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자원이동성의 증가, 그리고 정보재(information good)의 시장경제에서 비중증대 등이다.

이러한 필연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정보나 지식과 정보사회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며, 바로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우리사회의 현상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때로는 태풍처럼 요란스럽게, 때로는 유령처럼 조용히[윤영민, 1999] 다가온 정보사회를 궁극적으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제도적, 경제적 및 기술적인 제약이 제거되어 정보가 생산, 유통, 가공 및 처리되는 과정이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필요 정보의 자유로운 선택과 입수, 활용이 마땅히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보나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된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보와 정보사회의 경제적 시각을 정리해보고, 나아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으로써 이상적인 정보경제의 신념과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는 또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의 민주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II. 정보사회와 정보경제

1. 정보사회의 개념

정보사회란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가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설명하려 하였다. 후기산업사회, 지식산업, 정보경제, 정보사회, 컴퓨터화, 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 탈부르조아, 탈자본주의, 탈근대, 후기문명, 후기경제, 탈프로테스탄트, 탈이념, 탈석유, 전자기술사회, 탈대량소비사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정보의 가치증대와 그 생산, 축적, 검색, 분배, 활용 및 이용에 관련되는 활동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하여 창출되고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웹스터[pp.27~61]는 분석적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정의를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기술적 정의

정보사회에 대한 가장 흔한 정의는 '눈부신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개념은 정보처리, 저장 및 전송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되어 엄청난 대변혁을 맞이하게 된 사회를 정보사회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 결합되고, 또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정보의 관리 및 분배에 급격한 향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기술의 모호성과 사회변동과정을 기술 결정론적으로 단순화하여 기술혁신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원을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반론[웹스터, p.33]이 제기되고 있다.

(2) 경제적 정의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보산업의 성장과 규모를 평가하여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보사회를 규정하는 접근법이다. 이 분야의 실질적 창설자인 Machlup[1962]은 정보사회를 통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Porat[1977]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정보사회를 파악한다.

결국 정보사회의 경제적 정의는 정보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함으로써 정보화 정도를 평가하는 부가가치접근법으로, 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 이상일 때 그 사회를 정보사회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 제기되는 문제점들[Monk, pp.39-63]이 제기되어 있다. 그 하나는 객관적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표의 배후에는 범주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어떤 것이 정보 부문에 포괄되고 어떤 것이 배제되어나, 하는가에 대한 숨겨진 해석과 가치판단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집합적 자료가 불가피하게 매우 상이한 경제활동을 동질화시킨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정보부문에 대한 양적 측정치 개발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을 질적인 기준에서 분리해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3) 직업적 정의

정보사회의 출현에 대한 혼란 척도 중의 하나로 직업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곧 정보업무와 관련된 직업이 지배적이 될 때 정보사회가 등장한다는 것으로, 직업분포상의 변화, 즉 정보부문에 종사하는 인구의 상대분포를 통해 정보사회를 규정하는 고용구조접근법이다.

정보부문-정보의 생산, 처리 및 분배-에 관련되는 직업의 범주는 주된 활동의 결과가 지식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 정보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보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과 앞의 두 범주를 지원하는 기술자를 포함한다.

한편 직업적 정의 역시 문제점이 상존하는 바, 그 주요 핵심은 노동자들을 특정한 범주에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노동자의 정확한 비율을 보여주는 통계적 수치는 연구자들이 범주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할당하는 복잡한 과정을 은폐하고 있다. 즉, 직업을 범주화하는 데 있어 '누가 정보노동자이고 누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위험한 명제'[Porat, 1978, p.5]이기 때문이다.

(4) 공간적 정의

지역을 연결하고 시간과 공간의 조직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적, 국제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 작동하면서 가정이나 상점 또는 사무실에 '연결망 사회'(wired society)를 예상할 수 있고, 이 통신망에 연결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통신망자체의 범위와 용량도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통신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메시지, 대화, 영상 그리고 명령을 전송하게 되었다. 공간적 정의는 바로 이런 사회를 정보사회로 규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통신망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공간과 시간

의 특성이 변형되어 왔는데, 간단히 말해서 바로 그 공간의 제약이 아주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컴퓨터통신을 통한 접촉이 직접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 그 자체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시공축약(time-space compression)으로 인하여 기업, 정부 그리고 개인까지도 지금까지는 달성하기 힘들었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문화적 정의

일상생활의 양식으로부터 우리는 사회적 순환에서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대의 문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미디어가 편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이는 곧 삶이란 본질적으로 상징화(symbolization)에 대한 것,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의 교환과 수용-또는 교환하려고 노력하거나 수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의미한다. 많은 논자들이 우리가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화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인정 속에서도이다. 이들 논자들은 이러한 발전을 양적인 개념으로 특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지만, 대신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기호의 바다 속에 있는 우리들 삶의 분명함(obviousness)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정보가 더 많아질수록 의미는 더 작아지게 된다[조동기, p.51]는 견해를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기호는 너무 많은 방향으로부터 생겨나고, 너무 다양하고, 급변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상징할 수 있는 힘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정보사회의 문화적 정의는 아주 쉽게 인식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의로서는 앞선 정의들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며, 정보사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설정하는 점에서는 문제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결국 정보사회는 지식이나 정보의 상대적 가치상승과 그 생산의 중시와 활성화, 이를 통한 사회적 지위확보와 경제적 부의 창출이 가능한 사회라는 데 대체로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보경제론

정보의 경제성 개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Knight[1921]에 의해서이다.[전석호, p.150] 그는 기업활동에서 부단히 마주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보의 경제적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정보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재화임을 전제하고 정보를 위한 그리고 정보에 의한 기업의 막대한 자본투자의 고도의 조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Knight의 정보경제성 개념은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970년대 중반에 '정보의 불확실성'에 이어서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연결되어짐에 따라 정보의 효율적 선택, 활용, 배분 등에 관한 많은 경제학적 논의를 표출시키기에 이르렀다.[Lamberton, 1984]

Knight 이후 정보경제론[飯沼 등, pp.93-122]은 Machlup, Porat, Jonsheer, Hogen, Katz와 梅棹, 村上·高島, 廣松·大平 등에 의하여 지식산업, 정보경제, 정보노동, 정보산업론, 정보산업, 정보경제론으로 구체적으로 규명이 시도된 바 있다.

한편, Braman[1999]은 정보경제에 대한 개념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생산물의 속성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으로, 이는 정보경제를 정보부문에서의 정보생산물이 역사적으로 다른 어느 기간보다 비례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둘째, 경제영역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으로, 이는 경제가 정보상품화를 통해 확대되어왔고, 그 유통이 결코 이전에는 상품화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정보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셋째, 경제가 기능하는 방법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 이는 정보경제를 시장이 핵심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조화로운 정보유통에 의해 대체되어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와 같은 정보경제의 3가지 개념화는 '정보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하는 정보경제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 결과 각 접근법은 공공영역이나 사적영역에서 의사결정자를 위한 아주 다른 원리와 정책, 실행방법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세 가지 접근법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첫 번째 접근법이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다.[Braman, p.118]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들, 즉 가계, 기업, 정부 등은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한 요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게되며, 이런 이유로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필요로 하게되는 것이다.

정보의 경제분석, 즉 정보경제론은 바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란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서 출발하여, 개별경제 주체들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여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며, 주어진 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작동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 시장균형과 사회적 후생수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영환, 1994]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이 아

나라 사유화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지배적인 나머지 정보의 공공성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공적인 영역에까지 침투되어 왔다.

3. 정보의 경제성과 상업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보가 필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 이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여 보면, 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정보, 완비(complete) 정보와 불완비(incomplete) 정보, 공적정보와 사적정보, 대칭정보와 비대칭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정보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 사전적 정보와 사후적 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어떤 정보는 값이 있는 정보이면서 불완전한 정보이고 또한 공적정보이면서 대칭정보의 상황을 가질 수도 있다.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정보를 재화(goods)나 용역(services)으로 분류되는 경제재로서 간주하여 경제적 가치부여의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전석호, 1997]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 인식되어 왔다.[Schiller, 1978, p.31] 즉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정보를 무상으로 입수, 분배되는 자유재로 국한시켜 정보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컴퓨터의 일반 상용화, 후기산업화 과정에 들어서서 정보나 지식이 노동을 대체할 만큼 새로운 생산력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지식기술의 체계, 사회의 생산양식에서 정보부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제기되는 정보경제나 지식경제의 출현, 또한 상품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 무형의 정보나 지식을 정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정보를 다른 경제재와 같이 그 생산과정이나 서비스과정에서 인간의 생산적 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

신정보기술의 활용이 정보봉사영역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재래의 정보봉사기관, 특히 도서관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신정보기술의 무한한 정보처리능력은 공적부문에게는 매력의 차원을 넘어서 그 존립기반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사적부문에게는 이윤추구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지닌 도구로 인식되어 졌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혁명에 의해 -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 - 공공분야의 운영업무 대부분이 현재 기업가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허버트 쉐러, p.65]

여기에 덧붙여 사적부문의 정보에 대한 투자증가와 공공정보의 개방압력,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삭감 등은 공적 정보영역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정보의 자유와 평등접근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래 전에 미국의 공공정책은 연방정부

가 정보유통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연방지원의 삭감,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Commission on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p.13]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범위가 경제 전역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이윤추구 정보기업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정보 생산, 조직, 축적, 배포에 관한 의문들은 공적인 부문은 존재가 미미하고, 사익 추구 정보부문의 전망은 압도적인 배려와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말하자면 민간 정보공급업자와 정부 내 그들 옹호자로 대변되는 사적부문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적 부문간의 정보공급에 대한 주도권 쟁취를 위한 갈등은 대단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상호간의 이익과 책임간의 심각한 가치관 혼란을 야기 시키기에 충분하다.

그 한가지 예로 쉐일러[Schiller & Schiller, p.154]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이와 같이 정보를 단지 지불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접근 가능하도록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평등에서 특정 조건으로 정보접근의 목표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민주적 질서의 본질적 토대가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 도서관 시스템은 스스로 정보상업화에의 참가여부를 수락 혹은 거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도서관 외부의 막강한 세력들에 의해 결정, 조장되어 왔던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보의 상업화와 사유화문제에 대해 ALA와 그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진 단체와 위원회들은 사적정보부문의 압력증가와 또한 미국도서관계에 의해 전개된 이러한 압력에 대한 저항을 여러 연구와 보고서, 회의 등에서 노정시킨 바 있다.[Gardner et al., 1976; Schiller, 1978; Schuman, 1982; Schiller & Schiller, 1988]

Ⅲ. 정보사회 이론과 정보경제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경제적 관심으로 정보를 취급하는 경향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적 재화로서 정보를 간주한 데서 기인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역동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Hamelink의 정리[전석호, 1997]에 따르면 낙관론적 시각은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집중화의 팽창, 표준화, 획일화, 착취 등과 같은 내재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보다 참여적이고 분권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정보접근에의 기회확대 등을 통해 권력분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자동화에 의해 기술적 노동대체가 확대됨으로써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개별적인 문화적 향유의 기회가 증가된다고 한다.

반면에 비관론적 시각은 경제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분업과 생산과정의 과절화, 제생산 국면의 통합된 통제 등을 초래할 것으로 관망되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미증유의 집중화된 통제가 가능할 것이며, 문화적으로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향수보다는 문화적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며, 문화적 서비스의 본질은 문화산업의 확산과 소비와 향락의 소모적 문화환경을 확산시켜 사회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기 규정적 메카니즘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양자를 구분 지우는 요인[한국사회학회 편, 1998]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정보에 대한 권력과 지배의 문제'에 국한시켜보면, 낙관론자들은 정보기술의 발전이 정보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정보불평등을 줄이고, 그 결과 인간이 보다 '살아갈 만한' 평등한 다원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결국 자본(권력)이 정보를 장악하게 되어 정보의 불평등(지배)을 낳게되어 낙관론자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정보경제를 보는 시각은 결국 정보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전술한 바와 같다. 정보화나 정보사회를 논의하는 여러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기존사회와의 차이와 단절을 강조하는 '정보사회'라는 개념을 주장하거나 동의하는 부류와,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이전 사회와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즉 기존 관계의 '정보화'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의 외부에서는 정보사회라는 용어의 사용을 두고 회의가 거의 없으나[웹스터, p.24], 그 내부에서는 정보사회의 개념과 용어 및 성격규정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사회와의 차이에 의해 특징되는 정보사회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에는 기꺼이 동의하지만 현 시기의 핵심적 특징은 과거와의 연속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다. 즉 전자는 정보사회의 개념을 지지하면서 과거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단절론적 관점'으로 정의한다. 후자의 경우는 정보화를 기존 관계의 연속으로 보는 사람들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연속론적 관점'이라 정의한다.

그러면 정보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접근법으로 정리하면서 이들 각각의 정보경제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단절론적 관점과 정보주의

(1) 단절론적 관점

정보사회에 관한 그간의 논의 추이를 보면 기술 유토피아를 꿈꾸는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절론적 관점은 후기산업사회(다니엘 벨과 그 추종자들), 포스트모더니즘(예를 들어 장 보드리야르와 마크 포스터), 유연전문화(예를 들어 마이클 피오레, 찰스 세이블, 래리 허쉬혼), 정보양식 발달론(마누엘 카스텔) 등을 들 수 있다.[웹스터, p.25] 또한 '물질 폐기론'의 길더[Gilder, 1989], '디지털 존재론'의 네그로폰테[Negroponte, 1995] 등도 낙관적인 입장을 대표하면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정보관련 정책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후기산업사회론이다. 벨은 후기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서 정보의 지식이 노동을 대체할 만큼 새로운 생산력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른바 '지식 가치설'을 주장하였다.[전석호, p.128] 이는 정보 또는 지식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속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변형된 자원으로서 체계화되어 질 때 지식의 가치가 주도되어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식이 자원의 변형에 적용되는 어떠한 체계적 형태로 될 때, 지식은 노동과는 달리 가치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동만, p.16] 지식과 그 응용이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과 노동이 공업화사회의 중심변수가 되어온 것처럼, 정보와 지식이 탈공업화 사회의 결정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정보주의

전술한 정보사회의 단절론적 관점, 즉 주류 정보사회론은 정보화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주로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순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질서에 역사적 보편성을 부여하는 지배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홍성태, p.3] 이 점에서 주류 정보사회론은 정보화 경쟁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담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를 포괄적으로 '정보주의'로 정의한다.

'정보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최근의 정보화를 분석한 연구자로는 카스텔[Castells, 1996]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정보적 발전양식을 구별하면서 정보주의를 새로운 발전양식으로 정의한다. 이 발전양식은 주어진 생산수준을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제시되는데, 그에 따르면 각 사회는 상이한 발전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발전양식은 정보처리로, 이것은 새로운 발전양식을 예고하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의 등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적 발전양식은 새로운 사회기술 패러다임으로서, 그 주된 특징은 정보처리가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관리의 모든 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조건짓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활동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주의에서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해 과학주의적이고 경제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주의는 현재의 정보화 경쟁 속에서 '신경제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즉 기존의 주류 정보사회론이 과학(기술)주의에 바탕하여 현재의 정보화 경쟁을 문명론적으로 합리화한다면, 신경제론은 탈냉전이후의 무한경쟁을 배경으로 현재의 정보화 경쟁을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홍성태, p.3]

신경제론의 전제는 정보사회가 더 이상 미래의 사회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망,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지식경제, 디지털경제 네트워크 경제, 사이버 경제, 웹경제, 정보경제 등의 이름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정보의 상품화와 그에 바탕한 기술혁신과 경쟁원리의 확대강화에 있다고 주장한다.[홍성태, p.81-2]

원래 지식경제론은 지식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다. 벨의 탈산업사회론에서는 이론적 지식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한편 Drucker[1993]도 경제적 자원으로 지식을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자본이나 천연자원 또는 노동은 이제 더 이상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이 아니며, 새로운 생산 수단은 지식이며 앞으로도 또한 지식일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가치는 이제 생산성과 혁신에 의해 창조되는 데, 생산성과 혁신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경제론에서의 지식에 대한 견해는 실증적 지식 혹은 수행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상업화를 전제로 하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리오타르[1979]는 지식의 상업화 맥락에서 팔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관심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정신의 경제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Gilder[1989], 약간의 물질적 자원을 이용해서 본질적으로는 지식의 산물을 생산해내는, 즉 수확 체증의 메카니즘하에서 운용되는 지식주도형 경제를 주장하는 아서[1996] 등도 경제적 측면에서 지식과 정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디지털 경제는 넓은 의미로는 존재의 정보경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이며,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의 대중화에서 비롯되는 사이버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제기된 디지털경제론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1998년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DOC, 1998; 1999]를 계기로 그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생산성에 있어서의 경제적 변화를 심도 있게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론에는 자본이나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오스적으로 변하는 기술환경과 그것에 빠르게 적응하여 큰 성공을 거두는 능력 있는 개인들이 있을 뿐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원동력은 기술이며,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책도 결국은 기술의 발달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변화를 조절하고 촉진하는 유일한 사회적 장치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디지털 경제론은 기술결정론과 시장주의가 결합한 이론적 혼성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홍성태, p.90]

따라서 기술결정론과 시장주의가 디지털경제론의 이론적 기저에 있는 한 정보와 지식, 정보기술은 주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정보와 정보기술의 산업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는 결국 정보서비스 분야의 상업적 확대를 의미한다.

그 결과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부문에서 정보와 정보기술에 대해 생산자 원으로서, 또한 독특한 독립된 재화로서의 가치를 무한히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주의적 시각은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정보라고 하는 전략적 자원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속론적 관점과 정보공유론

(1) 연속론적 관점

단절론적 관점이 과거 산업사회와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속론적 관점은 기존 관계의 연속으로 정보사회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신맑스주의(허버트 윌러), 조절이론(미셸 아글리에타, 알랭 리피에즈), 유연적 축적(데이비드 하비), 민족국가와 폭력(안토니 기든스), 공공영역(위즈겐 하버마스, 니콜라스 간헐) 등이 포함된다.[웹스터, pp.25~6]

위 이론가들 중에서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단절론적 관점을 견지하는 이론가들과는 달리 이들은 정보의 형식과 기능을 오래된 기존의 원칙과 습관에 종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부각된다.

이들 중 특히 Schiller[웹스터, p.130]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음은 인정하면서도 발전의 연속성에 대한 정보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보와 통신은 기존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친숙한 자본주의적 활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Schiller의 저작[웹스터, pp.133-4]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주장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정보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 발달되었으므로, 정보와 통신의 혁신은 이윤을 위하여 구매, 판매, 거래되는 시장의 압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의 핵심은 정보의 상품화를 향한 강한 추동력이며, 정보가 점점 더 시장성이 있는 조건하에서만 생산되며, 또한 정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대부분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논리는 계급불평등이 정보의 생산능력, 분배, 접근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으로, 계급이 누가 무슨 정보를 얻고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층구조 안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정보혁명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세번째 중요한 주장은 정보 및 통신영역에서 거대한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는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 사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자본주의는 기업적 제도, 즉 과도적인 조직체에 의해 지배되며 또한 이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경제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결국 정보와 정보기술은 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된다는 점이다.

(2) 정보공유론

전술한 정보주의가 정보화 경쟁의 지배이데올로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 정보사회의 모든 특성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정보화로 포상되는 생산력의 발달을 비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즉 자본주의적 경제 프로젝트로서 현재의 정보화 경쟁에 대항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존재한다. 현재 이 움직임은 주로 정보의 사유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정보공유의 정신'을 핵심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다.[홍성태, p.4]

원래 정보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로서 인식되어졌다. 그러므로 공적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하며, 가능한 한 넓은 공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이순재, 1992] 또한 이 원리는 접근가능성, 특권의 배제, 보편적 규범과 이성적인 정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보사유론의 강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출발되고 있는 정보공유론은 크게 두 가지 전통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그것이다.

먼저 사회주의 전통에서 정보공유론은 사적 소유 일반을 부정하는 사회체제에서 정보/지식은 당연히 공공재이며 공유재일 수밖에 없다[홍성태, p.143]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은경[1990]은 어떠한 경제재화 보다 강한 물신성을 띠고 있는 정보상품에 대한 생산의 무정부성이 그대로 관철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정보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사회전체의 통제를

반던 정보는 배타적인 사적 소유에 따라 통제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경계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사이버-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체제를 보편적인 민주적 접근을 통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생산적 잠재력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에서 찾는다. [홍성태, p.148]

결국 지식의 공유와 정보의 사회화는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 공통점이며, 정보상품의 생산수단의 사회와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보편적인 민주적 접근 등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전통에서의 정보공유론으로 이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에 기반하면서도 정보나 지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그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주장한다.

정보의 자유를 최상의 원리로 삼는 정보자유주의는 토마스 제퍼슨의 정치이념과 정보/지식론에 기반해 있다. 그는 정보/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촛불처럼 확산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즉 '내 초에서 불을 붙여가는 사람은 내 초의 불빛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고서도 자신이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다'하였다.[홍성태, p.150] 이는 바로 정보의 속성 중 아무리 이용되어도 그 자체는 소모되지 않는 정보의 비소모성과 한 개인이 소유하던 정보가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소유주에게는 그 정보가 그대로 남는 정보의 비이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나 지식의 공공재적 속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의 진척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사용을 자유시장의 가치체계 및 정보상품화와 연결시키는 정보주의와 정보사유론에 의해 점차 약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IV.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론

1. 정보정책

정보정책이란 정보의 생성, 이용, 축적 및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거나 그 규제를 해제시키는 일련의 법률, 규칙 및 정책으로, 파급효과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Braman[1989]은 정보정책 연구는 40개 이상의 학문분야에서 흩어져 연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Burger는 핵심분야를 경제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공공정

책론, 경영학, 정보학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정책 연구가 분산되게 된 3가지 요인은 먼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정보'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 둘째로 특정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으로서 오랜 동안 개발된 정보정책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의 제도 지향적 속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나 지식의 생산, 전달,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정보정책은 3가지 계층을 고려할 수 있다.[Rowlands, 1996]

(1) 기반정책(infrastructure policies): 사회전반에 적용되고 정보부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체계에서 그 활동을 제공하는, 예를 들면 조세법, 고용법, 설립의 자유 및 교육정책 등

(2) 수평적 정보정책(horizontal information policies): 전반적 정보부문에 걸쳐 특정적으로 적용되고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봉사에 관한 법률규정, 도서의 부가세 면제, 데이터 보호법 등

(3) 수직적 정보정책(vertical information policies): 특별한 정보영역에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예를 들면 지리적 정보공동체 등

공공정책에 대한 계층 모델의 함의는 정보정책과 관련된 힘, 영향력, 의사결정 등이 불가피하게 정부 내 여러 부문에 걸쳐 분산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개념적 문제점은 특정 정보정책 행위를 위한 전체부문의 정책가치와 모형을 한정하는 데 있다. 환언하면 신기술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민감하고, 정보시대의 함의에 반응할 수 있는 정보정책 체제(information policy regime)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밀착된 모형의 부재가 정보정책 문헌에서 다루어지는 비교적 새로운 주제다.

공공정책의 모든 측면에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정보정책은 그 가치와 방향성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보정책은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전략으로서 수립되어야 한다. Kristiansson[1996]이 지적한 것처럼 정보정책 행위는 역사적으로 연구와 개발, 정보시장 발전, 공식적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지적 재산권과 같은 법적 측면과 같은 특정 현안과 문제 영역에 대해 임기응변적인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일반적으로 정보정책 수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먼저 정보생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보의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전달 측면에서는 기반구조로서의 고품질 전송서비스가 가능한 정보망이나 전송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일차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망의 소유나 운영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누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전송시스

템이나 전송망과 서비스의 품질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정도가 가능한 한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정보정책의 사회, 문화,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다 정교한 지표 데이터를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정책 분석서 보다 창의적인 접근법과 설명적 모형 개발의 필요성, 정보정책의 형성, 채택 및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요인들을 더욱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 본연의 가치회복

미래학자나 우파 경제학자들의 논지에 따르면, 신경제는 산업시대의 수확체감(decreasing returns)의 경제원리를 물리치고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다[이광석, p.93]고 한다. 달리 말해 산업시대의 회소성의 원칙이 네트워크 경제에 이르면 마찰없는 풍요의 법칙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구시대의 경제논리는 종결되고, 상품의 무한한 복제와 이동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수확체증의 신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는 수확체증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포지티브한 승자들의 세계에서만 돌아갈 뿐이며, 시장은 수많은 다수의 약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확체증은 강자들만이 점유하는 독식의 패권논리다.[이광석, p.94]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 증대와 그 상품화를 통한 이윤추구 동기는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공평한 정보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즉 정보복지(information welfare)를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정보를 경제재(information good)로 인식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여 보자. 경제재로서의 정보는 시장거래에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Varian, 1998]

먼저 정보는 경험재(experience good)로서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한 재화를 경험해야만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때 그 재화를 경험재라 한다. 거의 모든 신제품을 경험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것이 매번 소비될 때마다 경험재[Shapiro et al., p.5]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정보는 규모에 대한 수확(returns to scale)이 높다는 점이다. 즉, 정보재의 생산에 있어 고정비용은 높지만 한계비용이 낮다. 정보재의 최초 사본을 제작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추가 사본은 제작(복사)하는 비용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재는 전형적으로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unexcludable)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정보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재화소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누면 나눌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보의 공공재적 속성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점차 사적 재화, 즉 경합성과 배제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에 비례하며 그 본연의 속성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순재, 1994]은 일반적으로 기술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법적인 협약이나 체계 등의 사회적 선택에 의해 수행된다.

정보나 지식의 소유나 접근이 새로운 이윤확보의 수단으로 제시되자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독점적 향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귀결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대안들이 부재하다고 보지 않는다.

정보나 지식의 소유권 문제가 개인, 집단은 물론 국가간의 정보유통이나 기술이전을 지연 시킴으로써 지식 격차가 초래되고 있으며, 점점 법은 저작자 개인의 보호측면으로 강화되고 있어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독점현상을 초래하고 있다.[전영표, p.228]

Mankiw[pp.228-229]는 지식의 창조는 공공재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어떤 수학자가 매우 중요한 수학정리 하나를 증명했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지식의 일부가 될 것이다. 지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민간기업들은 지식의 창조에 매우 적은 양의 자원만을 투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수학자는 자기가 증명한 수학정리에 대해 특허를 낼 수 없다. 이런 지식은 누구나 거저 배워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수한 기술지식(고성능 건전지 발명 등)은 특허제도를 통해 배제성을 갖지만, 일반지식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위에서 언급한 무임승차의 문제로 이하에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정부가 어떤 공공재의 사회적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 공급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은 모든 사람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적 창안인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나, 지식의 이전과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정보유통에 막힘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작자나 개발자에게 일정정도의 이윤 회수 기간을 최소한 보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한 조건 없는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정보격차의 해소

흔히 정보사회의 본질은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정보'와 지적 기술로서의 '정보기술'로 함축될 수 있다. 정보의 유통매체로 규정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산물들은 정보사회의 정착에 병행하여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보기술로 비롯되는 영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양분되는 바, 특히 후자의 경우 정보의 균등한 유통을 왜곡시킴으로써 정보사회의 이상적인 목표추구를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지식격차'(Knowledge Gap)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Tichnor 등[1970]에 의해 지식격차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체계 내에서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정보유통량이 증가될 때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보다 정보매체의 이용과 정보의 획득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계층간의 지식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지식격차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수준(교육수준에 의한 정보처리능력)차이, 개인마다 축적된 지식의 정도, 사회적으로 대인간의 접촉정도, 매스미디어 유형과 보급의 정보에 따라 지식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기반구조(Infrastructure)로서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그 잠재력에서 놀라운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반면에 불균등한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를 유발시킬 수 있음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되는 정보 불균등 현상을 의미한다.

정보사회의 무한한 희망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바 여러 사회계층간 심각한 정보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격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전석호, 1997] 첫째로, 사회경제적 개인별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채택단계에서 소유와 비소유의 여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여건 즉 수입의 정보와 직결된다. 또한 정보격차는 정보기술의 개인별 이용동기 여부와 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보추구의 동기도 낮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둘째, 정보기술의 선택과 이용을 수용자의 의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심리적 동기와 기초지식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적능력으로서의 컴퓨터 해득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보상품의 집중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의 구축은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가장 소비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도시보다는 도시에, 없는 자 보다는 있는 자를 추구하는 실리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뉴미디어의 선택의 다양성은 상징에 그칠 뿐 실제로는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정보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오히려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수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운영체제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보불평등을 야기시키게 된다.

정보 통신기술이 기존의 기술과는 달리 정보와 지식을 생산, 가공, 축적, 전송, 배포할 수 있게됨에 따라 종래에 사회의 공공재(화)(public goods)로 인식되던 정보의 상품화, 사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이순재, 1992] 이에 대해 설리[p.233]는 '이러한 현상이 결코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모든 종류의 정보를 상업적 품목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은 그 정도와 폭에 있어, 컴퓨터 등장 이전 시기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좀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욕구와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보기술은 정보의 상품화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침투의 마지막 보루인 정보 영역마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정보의 격차가 정보기술 소유의 함수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정보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신정보기술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신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및 선택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유층들에게 더욱 더 그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빈민층에게는 더욱 수혜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전통매체와는 달리 신정보기술은 그 사용법이 복잡하며, 이에 따라 개인은 그 정보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동기의 유발이 높아져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첨단 정보기술 사회에서 개인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 역시 개인의 재정적, 인지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 인지적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지식의 불균형은 필연적인 것이다.

최근 미국 상무성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9]는 신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격차를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정의하면서 세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각 세대의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의 보급과 사용정도를 소득, 인종, 교육, 연령, 지역 등에 따라 4만 8천 세대(모든 응답자는 15세 이상)를 면접조사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국가정보기반(NII)에 직접 연결된 미국인의 숫자는 급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여러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소수민족, 저소득층,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결혼가정의 어린이들 등이 특히 시골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자원의 획득이 어려워짐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정보격차의 해소 방안으로서 NTIA는 소수인종, 저소득층, 저학력층 및 실업자를 위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학교, 도서관, 종래의 커뮤니티 센터, 교회, 신용조합, 주택단지, 양로원, 박물관, 소방서와 경찰서, 기타 공공접근 시설 등에 '공공접근센터'(Community Access Center)의 확대설치가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정보화를 통해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부의 'Cyber Korea 21' 계획[<http://www.mic.go.kr/ck21/kor/index.html>]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중점추진과제를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등 양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문화관광부도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http://www.mct.go.kr/index_ko.html]을 발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자료 전용공간 조성, 디지털자료의 확충과 서비스 확대 및 공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서비스에 있어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민간저작물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에서는 무료로,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는 유료로 하되 국민 개개인은 최소비용으로 민간 디지털 저작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일차적으로는 양적 확장·증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아울러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보다 민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련될 때, 그러한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는 바로 사회적 산물로 형성되고 생성된 지식과 정보를 사회로 되돌려 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우선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4. 정보공유를 위한 사회운동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을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로 전제하고 있으나, 반면에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취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서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백옥인[1996]은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문화가 가져야 될 주요 내용으로 공동체문화, 나눔의 문화, 그리고 대항문화(counter-culture)를 제시한 바 있다. 먼저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의 광장이 있어야 하며, 의사를 소통하는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만드는 공동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네트(Net)는 뉴미디어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생활의 환경이자 조건이다.

정보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면 될수록 높은 잠재적 가치를 발휘한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쟁점은 초기 네트의 '탈상품화'와 '정보공유'라는 흐름에서

볼 때 네트에서 전개되는 이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네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급격한 진입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재상품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기의 '정보공유 정신'은 '정보 독점'과 '정보사유'를 위한 자본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카피라이트에 대한 카피레프트 운동이나 정보 독점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및 오픈 소스 운동은 네트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홍성태, 1999] 디지털의 속성은 무한히 변형할 수 있고, 덧붙일 수 있고, 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나눔의 문화는 사유화나 독점에 반대하는 새로운 아니 원래의 가치체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보의 비분할성과 비이전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바로 나눔과 공유의 당위성의 본질이다.

대항문화는 기성의 지배문화가 갖는 차별성, 위계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항상 있어왔던 밑으로부터의 문화운동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으로서 가장 먼저 이슈화되고 실제적 효과를 거둔 운동은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법률적 통제에 대항한 운동이었다. 이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법률적 개입이나 통제에 대항하여 시민적 차원에서 네트의 연대를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자율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 영역이다. 1996년 미국의 통신개정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통신품위법' 관련 운동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네트 시민권 확보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이루고 있다.[Godwin, 1998] '지적 소유권' 문제의 정치화는 반독점 투쟁과 정보공유권의 확보 및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독점에 대한 반독점 투쟁은 지적 소유권을 남용하여 독점을 강화하는 경제적 움직임에 대한 반독점 진영의 정치적 결집을 의미하며, 정보공유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정보의 공공화 및 사회성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으로 결집함을 의미한다.[백육인, 1997]

그 구체적인 예로써 199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으로 만들어진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즉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을 선언한 바 있다.[<http://www.ipleft.or.kr/>] 이 단체는 특히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하여, 지적 생산물의 공유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 인정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견해들을 선언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네트웍은 이전의 매체와는 상이한 새로운 내용과 구

조를 갖고 있다. 새로운 매체는 대안적 매체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으며, 현재 그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류와 안전의 유혹을 벗어나서 반항의 정신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주류문화에 대항하여 새로운 대항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운동, 특히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담론을 사라져가고 있는 고귀한 가치와 이념들을 복원하기 위한 유토피아적 열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보주의 이데올로기나 자본(시장)의 폭력 혹은 비이성에 대항하는 최후의 대안적인 장(field)이며 주체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공세적 입장은 못될지라도 최소한 수세적 방어는 가능한 것이다.

V. 결 론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윤리선언’(1997. 10. 30)은 도서관인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천명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의 공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 접근의 평등권을 확립, 지식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거부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는 명확한 듯하지만, 현재의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또한 단절론적으로 보느냐 연속론적으로 보느냐 간에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Giddens의 표현을 빌자면 특히 디지털형 지식이나 정보는 높은 수준의 시공간적 거리화(time-space distancing)를 달성하면서 국지성(locality)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맥락의존적 재구성(re-contextualization)이 자유롭고 용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디지털형 지식과 정보는 시간과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체화·포섭하며, 보관·관리하고 기록·반영하는 능력, 곧 고유역사성을 가질 수 있다.[박승관, 1999]

정보의 상업화는 거의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이순재, 1994] 이는 역사적으로 비영리 부분이며 원래부터 부여받은 심오한 공익으로 간주되어온 영역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정보접근의 기회를 비용지불 능력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정보접근에 대한 자유와 평등원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특정 “정보부

자”(information rich)를 위해 다수의 “정보빈자”(information poor)를 희생시킬 것이다.

현재의 정보사회는 현상적으로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되며, 상품의 성격을 바꾸는 혁명적 변환의 길로 들어와 있다. 형태를 가진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의 자본주의에서는 데이터와 정보,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여 그 소비가 곧바로 생산과 연결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급격한 상황변화와 가치전환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특히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는 정부로부터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외형적 성장지상주의, 개발지상주의, 그리고 확대지상주의의 이면에서 잠시라도 무시되었던 고귀한 가치들을 새로이 되돌리는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먼저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 추세와 공공화 추세는 이미 결정난 싸움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미래가 각기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장차 발생가능한 공공/사적 부문간의 갈등의 소지를 파악하여, 그 대책으로서의 정보정책을 수립하는 일과 최대한의 공공정책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를 극대화시켜, 정보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열린 공간의 마련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부문과의 보완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바, 그 형태는 공공부문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사적부문이 수용함으로써 대립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두 부문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직접적인 생산자이자 창출자인 사회구성원은 정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재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지식과 정보는 확대·재생산을 위해 환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체문화, 나눔의 문화, 그리고 대항문화로서의 사회운동은 전전하지 못한 자본과 왜곡된 제도, 형평성을 잃은 정책에 대한 마지막 비상구일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디지털이다』. 백옥인 역. 서울 : 박영출판사, 1995.
- 리요타르, 장-프랑수아 지음. 『포스트 모던적 조건-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이현복 옮김. 서울 : 서광사, 1992.
- 박승관. “지식정보사회의 이상과 한국사회의 현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시민사회 정보포럼편.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서울 : 대화출판사, 1999. pp.29-67.
- 飯沼光夫 外. 『情報經濟論[新版』. 東京 : 有斐閣, 1996.

- 백옥인. "네트와 디지털 문화." <http://plaza4.snut.ac.kr/~wipaik/essay5.html>
----- "디지털 경제와 지적 소유권", 《한국사회와 언론》, 1997년 겨울호.
----- "정보사회의 기원과 성격." <http://plaza4.snut.ac.kr/~wipaik/>
- 벨 D. 이동만 옮김.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구조』.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84.
- 셀러, H. I. "새로운 정보기술과 문화종속." 김세원, 추광영 공편저. 《정보화사회의 도전》(서울:무역경영사, 1987), pp.225-243.
- 아서, 브라이언 외. 『복잡계 경제학 I』. 김웅철 역. 서울 : 평범사, 1997.
- 웹스터, F.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서울 : 나남출판, 1998.
- 윤영민. "정보화의 병목." 크리스찬 아카데미 시민사회 정보포럼 편. 《시민이 열어나가는 지식 정보사회》(서울 : 대화출판사, 1999), pp.241-260.
- 이광석. 『디지털 패러독스-사이버공간의 정치경제학』.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이순재. "정보 및 정보기술의 상업화에 따른 정보유통의 불균형."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19집(1992). pp.83~112.
- "미국의 정보봉사에 있어서 공공부분과 사적부분간의 갈등과 상호작용." 《동래여자 전문대학 논문집》, 제13집(1994). pp.53~69.
- 이영환. 『정보경제학』. 서울 : 울곡출판사, 1999.
- 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 : 나남출판, 1997.
- 전영표. 『정보사회와 저작권』. 서울 : 법경출판사, 1993.
- 한국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개정판』. 서울 : 나남출판, 1998.
- 허버트 셀러.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 강현두 역.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92.
- 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1999.
- Braman, Sandra. "Defining information: an approach for policymakers." *Telecommunications Policy*, 13(3)(1989), pp.41-50.
- "The Information Economy: An Evolution of Approachs." In S. Macdonald, J. Nightingle eds., *Information and Organization*(Amsterdam : NorthHolland, 1999), pp.109-125.
- Castells, M. *The Information Age: Vol. 1.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ssachusetts : Blackwell Publishers Inc., 1996.
- Commission on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A Report to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hicago : ALA, 1986.
- Drucker, P.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3.
- Gardner, Jeffrey J. and David M. Wax. "Online Bibliographic Services." *Library Journal*,

101(1976), pp. 1827-32.

- Gilder, George. *Microcosm : The Quantum Revolution in Economics and Technology* ; 조지 길더. 『마이크로코즘 : 경제와 기술에서의 양자혁명』. 한영환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1.
- Godwin, Mike. *Cyber Rights : Defending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New York : Times Books, 1998.
- IPLeft 선언문 Ver.1.0. <http://www.ipleft.or.kr/>
- Knight, F. H.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MA : Houghton Mifflin, 1921.
- Kristiansson, M. "A Framework for Information Policy Analysis based on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Forces." *Inter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21(1)(1996), pp.19-29.
- Lamberton, D. M. "The Emergence of Information Economics." In M. Jussawalla and H. Ebenfield eds.,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conomics: New Perspectives* (Amsterdam : North Holland, 1894), pp. 7-22.
- Machlup, Fritz.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Mankiw, N. Gregory. 김경환, 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서울 : 교보문고, 1999.
- Monk, P. *Technological Change in the Information Economy*. London : Printer, 1989.
- NCLIS(1999). "Moving Toward More Effective Public Internet Access." <http://www.nclis.gov/statsurv/statsurv.html>
- NTIA(1999).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http://www.ntia.doc.gov/ntiahome/fttn99/contents.html>
- Porat, M. *The Information Economy: Definition and Measurement*. Washington, DC : U. S. GPO, 1977.
- Porat, M. "Communication Policy in an Information Society." In Glen O. Robinson, *Communication for Tomorrow: Policy Perspectives for the 1980's*(New York : Praeger, 1978), pp. 3-60.
- Rowlands, Ian. "Understanding information policy : concepts, frameworks, and research tool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22(1)(1996), pp.13-25.
- Schiller, Anita R. "The Potential of On-Line System: The Librarian's Role." In Allen Kent & Thomas J. Galvin eds., *The On-Line Revolution in Libraries*(New York : Marcel Dekker, Inc., 1978), pp. 31-37.
- Schiller, Herbert I. & Anita R. Schiller. "Libraries,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 Commerce." In Vincent Mosco and Janet Wasc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Madison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pp.146-66.
- Schuman, Patricia G. "Information Justice." *Library Journal*, 107(1982), pp. 1060-66.
- Shapiro, Carl, Hal R. Varian. *Information Rules*. Boston, MA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
- Tichnor, P. J. et al.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Opinion Quarterly*, 34 (1970), pp.159-170.
- U. S. Department of Commerce(1998).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http://www.ecommerce.gov/emerging.htm>
- U. S. Department of Commerce(1999).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http://www.ecommerce.gov/ede/>